

답변에 대한 "묻는 모임"의 견해와 항의 성명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은 다시로 가오루(田城郁) 국회의원이 2016년 5월 27일 자로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질문 주의서"에 대한 6월 7일 자 "답변서"를 보고(※) 그 답변서가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불성실한 것이기에 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항의한다.

본 모임은 지진 당시 일본 정부가 유언비어 유포와 학살에 주체적으로 관여했음을 인정하고 유족에게 사과하고 진상 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것, 그리고 자료의 항구적인 공개와 보존을 할 것을 강하게 요구해 왔다. 우리가 9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조선인 학살 사건을 문제 삼는 것은 희생자의 인권과 명예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의 진상 규명을 회피하는 것은 일본 국민과 정부가 다른 민족을 학살한 역사적 사실에서 배우지 못한 채 현재까지도 이어지는 학살의 배경이 된 배외적인 언사를 용서하는 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근래에는 (일본인)납치 사건을 이유로 조선 고등학교 학생들만 취학 지원금 제도에서 제외되었는데 이러한 흐름은 지방 자치 단체의 조선 학교 조성금 삭감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학생들의 책임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자치 단체가 마치 "이 아이들은 차별해도 괜찮다"라는 식의 공개적 차별을 허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일본 사회의 모습이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힘은 미약하다.

9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재일 동포가 민족 옷을 입고 밖을 돌아다니지 못하는 관동대지진 때와 같은 일을 겪고 있을 때 우리는 1923년 당시 학살의加害자가 된, 또는 학살을 방관하고, 그것을 막지 못한 일본인을 상기시켜야 한다. 그리고 다시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학살 사건을 방치하지 않고 진상을 밝히도록 양식 있는 시민과 함께 일본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강하게 요구할 것이다.

[항의 성명]

다시로 가오루 의원의 질문 주의서에 대한 정부의 답변에 강력히 항의한다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중국인 학살 사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진지하게 대응하라—

1923년 관동대지진 때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다" "우물에 독을 넣는다" "폭탄을 던진다" 등의 유언비어가 퍼져 관동 지방의 각지에서 군대와 경찰, 자경단들이 다수의 조선인과 중국인을 학살했다.

이런 사건의 상세는 2003년 일본 변호사 연합회 인권 옹호 위원회의 "간토대진재(관동대지진) 인권구제 신청사건 조사보고서" 및 "권고서", 2009년에 발표된 내각부 중앙 방재 회의 "재해 교훈의 계승에 관한 전문 조사회"의 제3기 보고서 중의 "1923 관동 대지진 보고서" (제2편)에도 기록되어 있다.

우리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 책임을 묻는 모임"은 오랫동안 이 문제에 대한

조사와 추모를 해온 연구자와 각지의 시민이 중심이 되어 2010년에 출범했다. 그동안 정부와 사회에 널리 알리며, 원내 집회 및 학습회, 정부에 대한 청원 서명 등을 해왔다.

지난 2016년 5월 27일 다시로 가오루 민진당 참의원 의원이 다음과 같은 질문 주의서를 참의원 의장에게 제출했다(질문 제 131호). 이에 대한 정부의 답변서는 우리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

질문과 답변은 다음 세 가지이다.

〈질문 주의서〉

질문1 정부는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중국인 등의 학살 사건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는가.

질문2 일본 변호사 연합회 "관동 대지진 인권 구제 신청 사건 조사 보고서" 및 "권고서"(일변연 총 제 39호 2003년 8월 25일)는 어느 기관이 수리하여 내용을 정밀 조사하였나? 그리고 그"권고서"에 대한 대응에 어떤 검토를 더하였기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는지 설명을 요구한다.

질문 3 중앙 방재 회의"1923 관동대지진 보고서"(제 2 편 2009년 3월)는 "과거의 반성과 민족 차별 해소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그에 더하여 유언비어의 발생, 그리고 자연재해와 테러와의 혼돈이 현재도 생길 수 있는 상황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224쪽)고 했다. 이번 구마모토(熊本) 지진 때에도 "구마모토의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넣었다" 등의 루머가 인터넷에 넘쳤던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다시 이 중앙 방재 회의의 보고서에 귀을 기울이고 이 보고서의 지적 사항에 진지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그 의지는 있나.

〈정부 답변서〉

답변 1에 대해 질문하신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중국인 등의 학살 사건에 일본 정부가 관여한 것"에 대해서는 조사한 한에서는 정부 내에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

답변2에 대해 질문하신 "일본 변호사 연합회 『관동대지진 인권구제 신청사건 조사 보고서』 및 『권고서』(일변연 총 제39호 2003년 8월 25일)"에 대해서는, 2003년 8월 29일 자로 내각관방에서 수리하여 그 해 9월 3일자로 경찰청 및 법무부에 회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 또 "내용을 정밀 조사했는지" 및 "어떤 검토를 더하였기에 답변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것인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조사한 한에서는 정부 내에 그 사실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은 곤란하다.

답변 3에 대해 질문하신 "지적 사항"이 뜻하는 바를 잘 모르겠지만 정부로서는 재해 발생 시에 이재민 분들의 안전과 안심 확보에 힘쓰는 것은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상의 질문에 대한 답변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생각한다.

질문1에 대해. 질문 주의서에는 일본 변호사 연합회가 조선인, 중국인 학살에 국가의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 총리대신 이하 모든 각료들도 구성원인 내각부 중앙 방재 회의의 보고서에도 정부와 군대, 경찰이 유언비어 전달과 조선인, 중국인 살상 사건에 연루된 점을 지적하고 있다.

내각 총리대신에게 보낸 일본 변호사 연합회의 권고와 중앙 방재 회의 "재해 교훈의 계승에 관한 전문 조사회 보고서" 양쪽 다 정부가 조선인, 중국인 학살에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부 내에 기록이 없다고 하는가. 당시 계엄 사령부가 쓴 기록과 방위성을 비롯한 공적 기관에 보관된 기록 외에 도대체 어떤 "기록"이 필요한 것인가.

질문 주의서에도 기술되어 있듯이, 지진 당시 정부는 "조선인 폭동"을 사실로 간주하여 전국에 무선전신으로 조선인에 대한 경계를 명령했다. 그리고 이러한 유언비어를 퍼트려 학살을 일으킨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 두려워, 유언비어가 사실임을 증명하고자 노력했다.

질문2에 대해. 권고를 경찰청과 법무부에 회부했다는 말은 하면서도 대답하지 않기로 한 경과에 대한 기록이 일절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또한 만약 그 경과가 애매하다면 다시 한번 권고에 대해서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질문3에 대해. "지적 사항"의 내용은 질문 안에서 지적하고 있는 그 외에 해석의 여지는 없다. 관동대지진 당시의 학살과 같은 사건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과거의 역사에서 진지하게 배울 필요가 있다는 질문 주의서 전체를 관통하는 취지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일반론으로 둔갑시키려는 것은 과거를 반성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상과 같이 이 질문 주의서에 대한 답변에 나타난 것은 학살 사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관여를 인정하는 대답을 피하면서 학살 사실을 밝힌 조사와 연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일본 정부의 모습이다.

그것은 즉 "과거의 반성과 민족 차별 해소 노력"에 진지하게 대면하지 않고 중앙

방재 회의가 세금을 들여서 만든 보고서를 무시해도 비판받지 않을 것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일본 정부의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이러한 불성실한 일본 정부의 대응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

2016년 7월 26일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의 국가책임을 묻는 모임

공동대표 : 이시다 타다시(石田貞)、이시바시 마사오(石橋正夫)、

강덕상(姜德相)、야마다 쇼지(山田昭次)、요시카와 키요시(吉川清)